

상가임대차법 추석 전 국회 문턱 넘을까

20일 본회의...여야, 은산분리·규제혁신법 등 이견 여전 한국당 패키지 처리 고수에 난항...정계특위 구성도 평행선

여야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제혁신·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법·규제혁신법·상가임대차보호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뺀 나머지 법안과 관련,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지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법안을 빼면 사실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빠른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쟁점 법안 중 최근 소관 상임위원 정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지난달 일찌감치 합의에 이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외하면 여야 협상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협상 진도가 가장 빠르다. 여야는 최근 소관 상임위원 정부위에서 대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와 카카오페이와 케이뱅크 등 기존 사업자 지원 확대 허용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대기업의 대주주 자격 제한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해당 방침이 은산분리 완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서왔지만, 관련 내용

을 시행령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에 거의 합의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여당 내 이견이 큰 만큼 민주당 내 합의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의 경우 진전이 더더 현재로서는 20일 본회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복수의 상임위에 걸쳐 있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기재위 등에서 아직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이 반대해 쟁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합의가 거의 마무리된 법안부터 본회의에서 별도 처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한국당이 패키지 처

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 패키지 처리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민주당은 "특위는 특위, 법안은 법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오는 17일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더 논의해보자"며 "상임위별로 논의 중인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의 경우 진행 상황을 종합해보고 추석 전 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외하면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석 전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겠다는 민주당의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 "평화·번영의 길"...야 "깜깜이 회담"

여야, 남북정상회담 성과 기대와 우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여야 5당은 저마다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엿갈려 표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아직 회담 의제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깜깜이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70년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마치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 남북 두 정상의 손에 달려있다"며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쓸 날이 머지않았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평양회담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아직 의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정상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의 의제는 첫째도 북한 비핵화, 둘째도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성과를 끌어내는 남북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평화당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한 선발대의 안병과 2일 남은 본회의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70년 냉전이었던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야 한다"며 "국민들의 바람과 세계의 이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사청문회 2R

17~20일 5개 부처 장관 후보

여야는 이번주 펼쳐지는 '인사청문 2라운드'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1라운드'가 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청문회였다면, 오는 17~20일 열리는 '2라운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중대한 하자가 없는 만큼 '적극 엄호'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이 인사청문 기간과 겹치면서 여론의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리겠지만, 2기 내각 인사들의 정책과 도덕성을 놓고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청문회는 19일 현역 의원 출신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전망된다. 야당은 그동안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에게는 다소 관대함을 보이며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갔던 관행을 깨겠다며 단단히 버는 중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맞서 '국민성장론' 제시

"시장 자율에 맡겨 배분...탈국가주의 정책 패키지 내놓겠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정책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 (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 한 뒤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잠 못든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경제라는 게 김 위원장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

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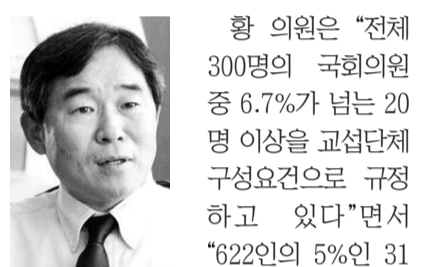
"국회 교섭단체 요건 20명→10명 완화"

황주홍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수가 14명으로 황 의원이 소속된 평화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622인의 5%인 31인 이상인 독일 하원,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인 일본 중의원 등의 교섭단체 구성요건보다 많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JP 훈장추서 사유는 IMF 극복 경제 기여"

정부 훈장추서 사후의결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사후의결했으며 추서 근거로 '고도경제성장 견인과 IMF 극복'을 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국무조정실(총리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종필 전 총리 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영택·남덕우 전

총리도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며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선(先) 추서 방침을 밝혔다. 심 의원은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공개를 거절했다. 대신 국무조정실은 의원실에서 공적조서라도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종필 전 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적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